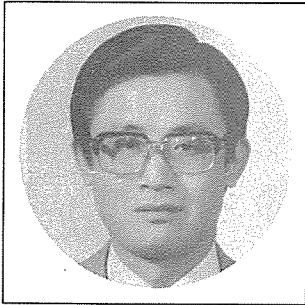


汎國家的인 科學技術진흥시책을



朴 漢 奎
〈延世大工大교수〉

지금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및 기술 전수의 기피등 여러가지 어려운 국내외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과학기술진흥방안에 덧붙여서 몇가지 사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사회발전방향에 있어서 첨단산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신화될 것이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과학기술진흥의 풍토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정책과 각종 시책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 개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이러한 기반 위에서 첨단 산업부문은 물론 재래산업 산업부문의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산업구조의 체질을 제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학기술진흥의 주역이 될 창의적 과학 두뇌와 과정에 기술인력의 양성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며,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체와 연계 시키는 정보인력 은행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과학기술자의 국내 유치문제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첨단기술분야의 독자적 기술개발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국책연구개발사업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산·학·연 공동의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세제지원을 제도화하여 해외 첨단기술의 국내 조기정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넷째,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진흥의 풍토를 소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국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전국의 첨단기술단지화를 추진하고, 이 첨단기술 단지가 대학과 상호 보완의 관계가 되도록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업의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상향 조정해서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생산을 위한 활로 개척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의 여러 시책들이 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되도록, 하여 기업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첨단기술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 뱅크화 함으로써 유기적인 기술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첨단 기술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우 하우등 기술개발과 직결된 정보를 민간 기업들이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테크노마켓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후 남북간의 기술합작문제 및 공산권 국가와의 기술보급율이 정책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배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기술, 환경보전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된다